# 문 대통령, 하반기 외교일정 분주

## 동방포럼·유엔총회·평양방문 등 줄줄이
## 김정은 위원장과 세번째 만남 성사 관심
## 청 "판문점선언·센토사 합의 실현 성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시계'가 올해 하반기에도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중대 관문을 돌파했지만, 하반기 역시 러시아 동방경제포럼과 유엔총회 등 굵직한 외교일정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성사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첫 외교행보는 21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냉전체제 극복노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김 위원장에게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요청한 바 있어, 문 대통령도 이 포럼에 참석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남북 정상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

동방경제포럼이 아니더라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남북 정상의 만남은 올해 가을을 넘기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한 남북미 3국의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전후해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거나, 9월 중하순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이후 남북 정상이나 남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방경제포럼 참석여부 등은 논의된 바 없다. 이벤트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은 북미대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문 대통령의 외교일정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런 외교무대를 최대한 활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문을 열어 뒀다.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를 실현해 가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를 위해서라도 외교 이슈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북미관계·남북관계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나 신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와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체육회담'에 앞서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오른쪽)과 원길우 북한 체육성 부상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로로 달린다

## 북방경협 본격화…한반도 신경제구상 모델

동해안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도연결이 본격 추진된다.

북한과 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경제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남북한과 중국·러시아간 광역전력망인 슈퍼그리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도 시작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 주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방안 중 하나인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확정했다.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중국의 동북 3성 진흥전략,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의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으로 삼기로 했다.

신의주·단둥, 나선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대상이다.

북방위는 또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북부선 조기 착수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운송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해상으로는 43~50일 걸리지만, 철도 복합운송을 하면 25~35일 걸린다.

북방위는 러시아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요금인하, 부족한 회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대륙철도(TCR)의 우리 기업전용 블록열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북한과 중국·일본·러시아 광역전력망인 슈퍼그리드 구축은 중국·일본과는 정부간 협의채널을 마련하고, 러시아와는 전력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북방위는 이 밖에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혁신플랫폼을 구축,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 12월 사형제 폐지…인권위·법무부 협의 중

## 정부, '세계 인권의 날' 대통령이 직접 선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으로,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형제의 대체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유지에 관한 의견이 고개를 든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오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10월 10일인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심 국장은 "지금까지 사형제 관련 실태조사가 단순히 찬반의견을 물었다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석방없는 종신제 등 대안에 대한 찬반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대답 역시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국장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가입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지역주의·색깔론 벗어나야 정치발전"

## 문 대통령 "높은 지지에 두려움…자만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나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가 이제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아주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국정에 대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 구도 속에 기득권을 지켜 나가는 그런 정치도 이제 계속될 수 없게 됐다"며 "지역주의 정치와 색깔론에 의지하는 분열의 정치를 벗어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제도 주장이 나올 때 제가 '그렇게 되면 이 총리 같은 좋은 분을 총리로 모실 수 있겠나'라고 표현한 적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받은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며 "어깨가 무거워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의 두려움이다. 부족한 점이 더 많지만 잘하라는 주마가편과 같은 채찍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크게 3가지 자세를 주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첫째는 역시 유능해야 한다"며 "이제 모두 1년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둘째는 늘 강조하듯 도덕성"이라며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존중하는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태도"라며 "정치와 공직사회가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동떨어진 것이 이 부분이다. 공직자라면 반드시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가브리핑

# 통합 물관리 정착·발전방향 모색

## 주승용, 정책토론회 개최…"물 관리 정책 전환점"

국회 물관리연구회(대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 체계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로운 물관리 체계 아래서 통합물관리 체계로의 안정적 연착륙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은경 환경부장관 등 국회 물관리연구회,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주승용 의원의 개회사와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환영사,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허재영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물 관리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주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물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각계의 이견으로 줄다리기만 해오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이뤄졌다"며 "이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며,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이 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국회 물관리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통합물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경진,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 "지역경제 활성화·국토균형 발전 기여"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18일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서 국비 지원비율을 현재의 60%에서 최대 80% 이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에 앞서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지원 100%에 달하는데도 불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6대 4의 비율로 지원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간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통시장간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 최대 80%까지 국비가 상향 지원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사업 활성화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